

제410회 국회(정기회)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업 무 현 황

2023. 10.



방송통신위원회
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목 차

I . 일반 현황	1
II . 주요 정책과제	3
1. 디지털·미디어 혁신 성장전략 추진	4
2.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	7
3.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	11
4. 디지털·미디어 규범 확립	14
III . 주요 현안 과제	15
1.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	15
2. 가짜뉴스 근절 추진	16
3. 방송광고 제도개선	17
IV . 참고 자료	18
1. 2023년도 입법계획 및 계류법안 현황	18
2.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 개요	19

I.

일반 현황

□ 연 혁

- 2008. 2. 29. 방송통신위원회 설립(방송위원회, 정보통신부 조직·기능 통합)
- 2013. 3. 23.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
- 2023. 8. 25.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

□ 주요 업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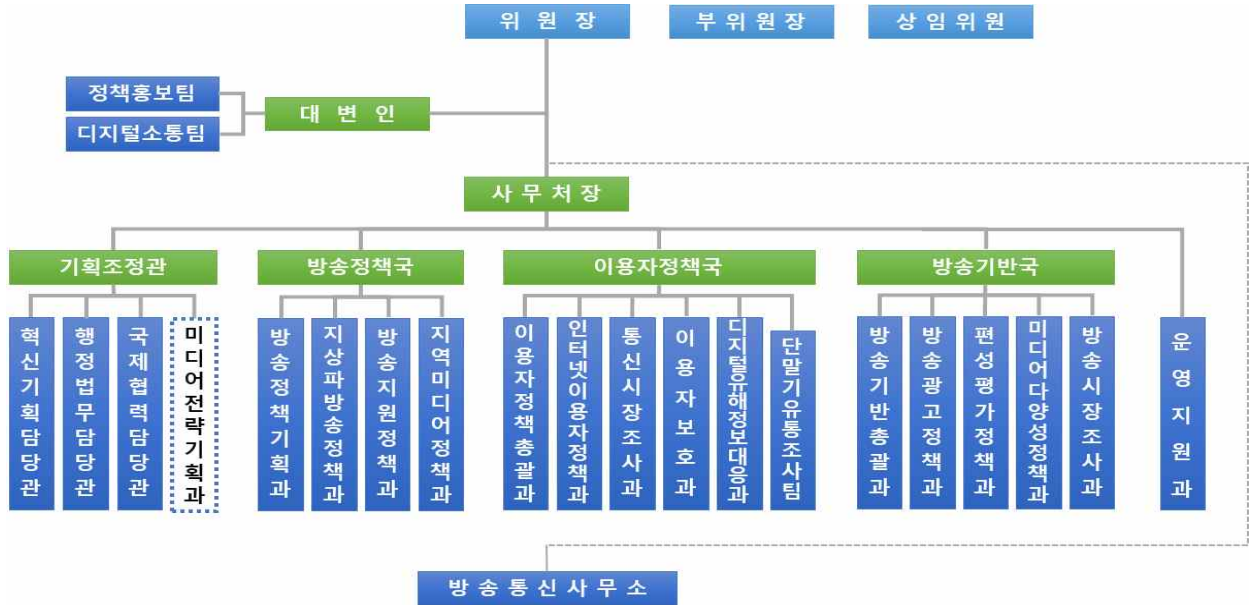
- 방송정책 기획, 지상파 방송 정책, 종편·보도 방송 등 방송채널 정책, 방송용 주파수 관리
- 방송광고 및 편성평가 정책, 보편적 시청권 보장, 미디어다양성 정책
- 방송통신 시장 조사 및 이용자 보호, 시청자 권익 증진, 인터넷 윤리,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- ※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, 정보통신망 상의 불법정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‘방송통신심의위원회’가 수행

□ 소관 법률

분 야	법 률 명
방 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(일부) • 방송법 (일부) • 한국교육방송공사법 • 방송문화진흥회법 •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•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(일부) • 전파법 (일부)
통 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기통신사업법 (일부)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) •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(일부) 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□ 조직 및 정원

○ 조직 : 1처 3국 2관 18과(담당관) 3팀 / 1소속기관



○ 정원 : 279명(본부 234명, 소속기관 45명) (’23. 9월 현재)

구분	정무직	공무원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 이하	계
본부	5	6	5	14	17	75	112	234
소속기관	-	-	-	1	-	5	39	45

□ 예산 및 기금 : (’22년) 2,561억원 ⇒ (’23년) 2,607억원 [+46억원]

○ (재원) 일반회계 493억원, 방송통신발전기금 2,114억원

○ (기능) 인건비 240억원, 기본경비 44억원, 주요사업비 2,323억원

□ 주요 유관기관

기관명	대표자	주요기능	근거법률
한국방송공사 (KBS)	-	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·외 대상 방송 실시, 방송문화 보급 및 수반 사업 등	방송법 제43조
한국교육방송공사 (EBS)	김유열	교육·지식·정보·문화·교양 분야의 방송 콘텐츠 제공, 교육방송 관련 연구개발 등	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
방송문화진흥회	권태선	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 사업 수행 등	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(KOBACO)	이백만	방송광고 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4조
시청자미디어재단	조한규	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법 제90조의2

II.

주요 정책과제

비전

혁신 성장 디지털·미디어 동행 사회

구분

정책 목표

주요 업무

핵심
과제

① 디지털·미디어
혁신 성장전략 추진

- 중장기 디지털·미디어 정책비전 설계
-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자원 확충
- 미디어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
-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 지원
-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

②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

-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
- 미디어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
-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
- 재난방송 운영체계 고도화

③ 디지털 이용자
보호 강화

-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
-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 강화
- 일상 속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 해소
- 방송통신 불법유해정보 등 대응체계 정립
-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

④ 디지털·미디어 규범
확립

- 디지털·미디어 규범 확립

① 디지털·미디어 혁신 성장전략 추진

①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

□ 중장기 디지털·미디어 정책비전 설계

- (미래지향적 미디어 통합법제) 매체별로 분산된 미디어 분류체계 정비를 통한 신·구 미디어 법체계 일관성 제고 및 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(안) 마련 추진
 - 미디어 통합법제(안) 마련을 위해 미디어정책연구반 운영(22.12월~), 미디어 법·체계 개편방안 관련 정책연구(23.6월~) 수행 중
- (우리 방송역사 정립 및 발전방향 모색) 방송역사 100년 고찰 및 미디어 미래비전 수립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(시기·내용 등 구체화 검토)
 - 기념사업 내용·일정 등 추진방안 검토를 위한 관련 정책연구 수행 중(23.6월~)
- (디지털·미디어 미래전략)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달라진 시장환경을 반영한 '디지털·미디어 미래 발전전략'(제6기 방통위 비전) 마련(23.하)

□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 확충

- (광고 규제체계 정비)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도록 '원칙 허용, 예외 금지' 체계* 도입 검토 및 추진(방송법 개정)
 - *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(7가지 → 프로그램 내·외 광고 등 3가지)
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일총량제 전환 등 형식규제 완화
- 사업자, 시민단체, 학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(계속)

- (분담금 제도개선) OTT 및 대형PP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기준 정비 및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('23.상~)
 -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('23.6월~)
- (수신료 투명성 강화)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수신료 회계분리제도 도입과 객관적인 수신료 산출·배분기준 마련 추진
 - 수신료 회계분리 등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(계속)

□ 미디어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

- (방송 편성규제 개편) 지상파·중편채널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(60%) 개선,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상한(90%) 폐지,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제도 합리화 등 편성규제 개선 검토(방송법 개정안 마련)
 - 오락, 1개국 수입물 및 순수외주제작 등 편성규제 개선 관련 분과 회의('23.3월~7월, 3회)
- (소유·겸영규제 개선) 경제성장, 미디어 다변화 등을 고려, 방송사 소유규제 및 겸영규제 개선 검토 및 추진
- (OTT 해외 진출 지원) 제2회 국제 OTT 포럼 개최('23.11월) 및 국내 OTT 전략적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분석·이용행태조사 대상 국가 확대(3개국→4개국)('23.12월)
 - 국제 OTT 포럼 자문회의('23.1월) 및 해외시장·이용행태조사 인터뷰 완료(~'23.9월)
 - ※ '23년 해외시장조사(대만, 인도네시아, 일본, UAE), 이용행태조사(멕시코, 브라질, 일본, 영국)

□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 지원

- (본인확인수단 다양화) 핀테크, IT 서비스 등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 지정 추진

- '22년 신규 4개 기관 지정, '23년 신규 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(4월), 현장실사(6월), 종합심사(8월), 방통위 심의·의결(9월, 1개 기관 지정)
- (위치정보산업 지원) 드론·자율주행로봇 등 ICT 융합서비스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정보 중소·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
- 사업화 진단 및 컨설팅, 투자유치, 특허·상표 출원 등 각종 사업화 지원 실시
 - ※ '22년 30개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체 지원 완료, '23년 30개 선정 및 지원 중(8~12월)

□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

-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미디어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통위 내 미디어정책연구반 운영('22.12월~)
 - * 국무총리 소속 '미디어·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' 출범에 따른 운영 지원 및 관련 논의 참여('23.4월~)
- 정책연구반 활동,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토대로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 추진체계 마련('23.하)

② 향후 계획

- 디지털·미디어 미래 발전전략(제6기 방통위 비전) 마련 : '23. 12월
- 미디어 통합법제(안) 마련 : '23. 12월

②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

①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

□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

- (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)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행점검·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('23.하~)
 - 공영방송 협약제도 운영에 관한 정책연구 실시('23.6월~)
- (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확대) KBS 및 EBS 저작권 보유 콘텐츠의 무료제공 확대('23년~)
 - KBS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스트리밍 채널 확대('23.3월) 및 무료 OTT서비스(KBS+) 개시('23.9월)
 - EBS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 무료 이용 대상 확대('23.3월)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학프리미엄 서비스 무료 전환('23.7월)
- (지역방송 경쟁력 강화)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·유통('23년 예산 45.3억원)을 지원하고 지역방송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('23.12월)
 - 프로그램(25개사 48개) 제작 지원('23.3월~), 베트남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('23.6월)
 -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매 3년마다 지원계획 수립, 관련 정책연구 실시('23.6월~)
- (공적채널 평가)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해당 채널의 콘텐츠 기획·제작·편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 신규 개발('23.하 공적채널 평가 기본계획 수립, '24년 시범평가 수행)
 - 공적채널 평가방안 논의를 위한 제작역량평가위원회('23.3월)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('23.6월)

- (수신료 제도개선) 수신료-전기요금 통합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
 -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('23.7월)

□ 미디어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

- (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추진) '23년 재허가·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*를 대상으로 매체별·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재허가·재승인 심사를 추진하되, 방송의 공익성·공적책임 관련 심사평가 강화

* 지상파 : KBS, MBC, SBS, 지역MBC(13), 지역민방(7), 라디오(11) ('23.12월)
 종편·보도PP : TV조선('23.4월), MBN('23.11월)

- (지상파) 「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*」 마련('23.6월) 및 재허가 심사 추진(~'23.12월)

* 주요 제도개선 사항: '공적책임·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' 심사항목 배점 확대(90점→120점), 심사위원(익명)평가점수 공개, 매체 통합심사, 제출서류 간소화 등

- (종편PP) 「종편·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('22.9월)」에 따라 '23년도 상반기 종편PP(TV조선)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('23.2월) 및 재승인 의결('23.3월)

※ '23년도 하반기 종편PP(MBN)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재승인 심사결과 의결은 '23.11월 예정

- (포털뉴스·동영상 투명성 확보) 추천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기사 배열·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'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'를 법적 기구로 설치 검토 및 추진('23.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)

- 제2기 협의체 구성('23.8월) 및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

- (포털뉴스제휴 신뢰성 강화) 포털(네이버, 카카오)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·구성 요건, 역할 등 법제화 검토 및 추진('23.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)

- 제2기 협의체 구성('23.8월) 및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련 법제화 검토

- (가짜뉴스 근절 추진) 가짜뉴스 신속 심의 및 구제제도 (패스트트랙) 활성화, 주요 방송사 팩트체크 시스템 실태점검 등 방송사 허가·승인 제도 개선 및 포털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마련

□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

- (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 제정)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격차 없이 미디어에 접근·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 마련
 -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(안) 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·운영('23.3월~)
- (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) 장애인방송 질적평가 제고 및 화면해설방송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
 - 시각·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송수신기(TV) 보급('23년 53억원, 20,000대 보급 예정)
 - ※ '22년도 전체 시각·청각장애인 대상 누적 보급대수 239,798대(누적보급률 35.5%)
 -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('23.4월~), 화면해설방송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(안) 검토('23.2월~), 음성-자막-수어 변환시스템 고도화('23.3월~)
- (미디어 참여 인프라 확충) 지역 간 균등한 미디어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경남·대구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(현재 10개 → '23년 12개)
 - 경남·대구 센터 개관 추진운영단 구성('23.7월) 및 구축 현황 점검(매월)
- (미디어 교육 종합계획 마련)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·활용·참여 지원 및 계층·세대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 (가칭'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 제고 종합계획' 수립('23.12월)
 - ▲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, ▲미디어교육 인프라 내실화, ▲미디어교육 전문성·체계성 강화, ▲민관협력 기반 확충 등
 - 방통위·교육부·문체부 실무협의('23.4월), 관련 정책연구('23.6월~), 종합계획 관련 부처협의 진행 중('23.9월~)

□ 재난방송 운영체계 고도화

- (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) 각 법률별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 및 재난방송 종합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 추진('23.12월 제정안 마련)
 - 재난방송 관련 법·제도 개선 연구반 구성 및 운영('23.4월~)

- **(재난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)** 재난 예보, 응급조치 및 원활한 재난방송 수행을 위해 재난관리기관 및 주요 10개 방송사(지상파·종편·보도PP)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재난방송협의회 활동 강화
 - 재난방송 정보공유 등을 위해 산불진화 영상 공유('23.3월, 산림청), 국민행동요령 자율방송('23.4월, 행안부), 영어 재난통보문 요청('23.4월, 기상청) 등 추진
 - 풍수해 대비 주요 10개 방송사의 재난방송 대처상황 점검회의('23.5·6월), KBS를 통한 국민행동요령 제작·공유('23.6월), SBS 재난방송 현장점검('23.7월)
 - **(방송시설 안전점검 강화)** 재난·재해 시 방송송출 중단사태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 방송사 확대(10개 방송사 → 36개 방송사)
 - 주요 10개 방송사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요청 및 접수('23.9월), JTBC와 공동으로 지진 등 방송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('23.9월)
- ※ '23년 방송시설 안전점검 완료 사업자
- 주요 방송사업자 7개(KBS, MBC, EBS, JTBC, 채널A, 연합뉴스TV, YTN)
 - 지역MBC 12개(부산, 울산, 경남, 충청, 강원영동, 광주, 목포, 전주, 여수, 제주, 원주, 안동)
 - 지역민방 7개(부산, 울산, 강원, 경인, 광주, 전주, 제주)

② 향후 계획

- 공영방송 협약제도 관련 방송법 개정(안) 마련 : '23. 12월
-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: '23. 12월
- (가칭)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 제고 종합계획 수립 : '23. 12월
- 2024년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: '23. 11월
- (가칭)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(안) 마련 : '23. 12월
- 포털 투명성 제고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(안) 마련 : '23. 12월
-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마련 : '23. 12월

3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

①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

□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

- (디지털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)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·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
- (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) 플랫폼 혁신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자율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(시범 운영 중) 설립·지원 근거 마련(전기통신사업법 개정, 과기부 공동)
 -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 성과보고회 개최('23.5.11., 범부처 합동),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중(과기부 공동)

□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 강화

- (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대응)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의한 불공정행위에 대응하여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분석* 및 플랫폼 사업자 규제체계 정비** (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)
 - * 플랫폼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(다크패턴) 등 신유형 피해 대응 등
 - ** 금지행위 유형에 플랫폼사업자 불공정행위 추가, 플로팅 광고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
 - 네이버 뉴스서비스 관련 실태점검 결과,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어 사실조사 착수('23.9월)
- (단말기유통시장 건전화) 알뜰폰 사업자의 과다경품 제공, 허위·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모니터링 강화·위법행위 상시 점검 및 조사
 - 알뜰폰 시장 건전화를 위한 경품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및 전문가 의견수렴('23.9월), 허위·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사례분석('23.10월)

□ 일상 속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 해소

- (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) 이동통신망과 호환되는 Wi-Fi 측위모듈이 미탑재되어 긴급구조를 위한 정밀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운 자급제폰·유심 이동폰에 대해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 추진
 - '22.2월 이후 출시된 국내 단말기부터 정밀측위 기능 사전 탑재 실시
 - '22.2월 이전 출시 국내 단말기에 정밀측위 기능 사후 탑재를 위한 이통사·제조사 합의('23.2월) 및 28종 단말기 기능개선 완료('23.9월)
- (유료방송 해지방안 합리화) 노부모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유료 방송 해지·변경신청 대리인의 제출 서류 개선*을 통해 입원자의 민감정보 보호 및 이용자 선택권 확대
 - * 입원사실 확인서/진단서 → 입원사실 확인서/진단서, 장기요양인정서, 요양원 입소사실확인서 중 선택
 -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리인 제출서류 개선 시행 중 ('23.4월~)

□ 방송통신 불법유해정보 등 대응체계 정립

- (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) 관계기관협의회* 및 민관협의회** 논의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잇힐 권리 보장 추진계획 마련
 - * 방통위·법무부·여가부·경찰청·대검찰청 등 5개 부처 ('22.9월 및 12월, '23.6월)
 - ** 방통위 등 5개 부처, 인터넷사업자, 학계·전문가 등 17명 위원 참여 ('23.3월)
- (방송통신 생태계 내 아동·청소년 보호) 청소년유해매체물 온라인 광고 금지 대상 명확화, 과태료 도입 등 제도개선(정보통신망법 개정)
 - 방송출연 아동·청소년 의견수렴 의무절차 신설 및 아동·청소년 연예인 관련 종사자 대상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추진(가이드라인 개정, '23.12월)
- (디지털폭력 원스톱 피해지원체계) 온라인 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 신속 삭제·차단 및 피해보상 법률자문·분쟁조정 알선 등을 위한 디지털폭력피해구제센터 설치 추진(정보통신망법 개정)
 - 정보통신망법 개정안(디지털폭력방지등) 마련을 위한 연구반 구성·운영('23.4월~)

□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

- (디지털 서비스 피해구제) 카카오 서비스 중단('22.10월) 등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이용자 고지 강화(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) 및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 제한·손해배상 기준 구체화 등 약관 개선
 -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('22.11월~)
- (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)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현행 부가통신 서비스별*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와 함께 대규모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업자 단위로도 평가 추진
 - * 검색·SNS·OTT·앱마켓·쇼핑·개인방송·모빌리티·중고거래·배달 등 9개 서비스
 - 디지털 플랫폼(3개사), 기간·부가통신(43개사)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('23.6월~)

② 향후 계획

-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 : '23. 10월
-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잇힐 권리 보장 추진계획 마련 : '23. 12월
- 디지털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마련 : '23. 12월
- '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발표 : '23. 12월
-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(안) 마련 : '24년 중

4 디지털·미디어 규범 확립

①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

□ 필요성

- 디지털·미디어의 일상화로 방송·온라인 상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나, 관련 법령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 및 권익 보호에 한계
- 디지털·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전반에 대한 범사회적·체계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적 규범과 윤리 기반 마련 필요

□ 주요 추진내용(안)

- 디지털·미디어 상에서 일어나는 국민 피해·불편 사항, 피해구제 관련 체계 및 법령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
 - ※ '23년 정책연구, 이용자·시청자 의견수렴 포함
-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피해구제가 미흡한 부분을 우선 보완할 수 있도록 디지털·미디어 전반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등 마련
 - ※ (예시) 방통위,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→ 사업자, 표준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
- 디지털·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디지털·미디어 윤리 기반을 정립하기 위한 관련 법체계 통합 정비 등 검토
 - 디지털·미디어 윤리기반 정립과 관련한 법·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 수행

② 향후 계획

- 디지털·미디어상 국민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: '23. 12월~

Ⅲ.

주요 현안 과제

1.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

□ 개 요

-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체계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협약제도 도입 추진

※ (해외사례) BBC의 경우 국왕이 부여한 칙허장(Royal Charter)에 따라 '07년부터 정부(DCMS)와 10년 주기로 협약을 체결

□ 주요내용(안)

- (협약 대상) 공영방송사(KBS, EBS)를 대상으로 하되, 방송법 개정을 통해 KBS와 먼저 체결하고, 이후 EBS법 개정 및 협약체결 추진
- (공적역할 및 운영원칙)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공적 역할(내용·편성 관련)과 운영원칙(운영 관련)으로 구분(KBS 기준)
 - 법률에 명시된 공적책무에 의거, 공영방송사는 계량화된 계획 제출
- (환 류) 협약 미이행 시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하거나,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가능

□ 향후계획

- 협약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방송법 개정 추진

2. 가짜뉴스 근절 추진

□ 개 요

- 가짜뉴스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,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및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마련 등을 통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

□ 주요 경과

- '23. 9. 6. 방통위, '가짜뉴스 근절 TF' 구성·운영
- '23. 9. 13. '가짜뉴스 근절 TF' 회의 개최 (방심위가 협력기관으로 참여)
- '23. 9. 18. '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' 발표
- '23. 9. 27. 가짜뉴스 대응 민관 협의체 1차 회의 개최

□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주요 내용

- ('가짜뉴스 신속통합 심의체계(패스트트랙)' 구축)
 - 방심위, 가짜뉴스 신고 홈페이지 운영 (9.21~) 및 심의전담센터 개소 (9.26)
 - 중대 사항* '긴급 심의' 실시 및 인터넷 사업자 협조 요청
 - * ①긴급 재난상황, ②중대한 공익 침해, ③개인이나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, ④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 유발, ⑤선거 결과에 영향
 -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방심위 협조요청 시, 그 내용을 확인 후 '심의 중' 표시 또는 삭제·차단 등 자율규제



- (팩트체크 검증시스템 실태점검) 지상파방송, 종편 **보**도PP를 중심으로 재허가·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'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(9.7~)

□ 향후 계획

- '23. 12월 :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

3. 방송광고 제도개선

□ 개요

- 매체환경 변화에 걸맞지 않은 방송광고 분야의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여건 개선 및 방송산업의 활력 제고

□ 주요 내용

- (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)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규제 개선 및 형식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방송법령 개정 추진
 - 방송광고 유형을 범주화(자막·중간광고 등 7개 → 프로그램 내·외 등 3개)하고, 법령개정 없이도 새로운 광고 도입이 가능하도록 개편
 -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(20/100)을 폐지하고 일총량제 전환, 광고고지 자막크기 등 형식규제 대폭 완화

⇒ 방송업계,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방송법 개정을 추진

- (타이틀스폰서십 확대) 프로그램 제목광고 또는 제목협찬(타이틀 스폰서십) 도입방법 및 매체·장르 제한 등 허용방안 검토

※ 현재는 협찬고지 규칙에서 문화·예술·스포츠행사(중계 및 관련프로그램)의 명칭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허용

- (크로스미디어랩 도입) 멀티플랫폼 매체환경에 따라 미디어랩사에 방송광고 외의 광고판매를 일체 금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
 - 방송사업자가 제작·송신한 프로그램을 OTT 등 전기통신역무로 제공하는 경우, 미디어랩사의 관련 온라인광고 판매 허용 추진

□ 향후 계획

- 네거티브 규제 도입 관련 「방송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 ('23.4분기)
- 크로스미디어랩 도입 관련 미디어랩법 입법 지원

IV.

참고 자료

1 2023년도 입법계획 및 계류법안 현황

□ 입법 계획

법안명	주요 내용
방송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방송광고 운영원칙 및 열거된 형태의 방송광고 유형 범주화를 통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▪ 정부와 공영방송 간 협약 체결 근거 마련
전기통신사업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령, 서비스 정의, 장·절 구조 등 체계 개편 ▪ 통신 산업 활성화, 통신 서비스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마련 ▪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주요 기능 및 설립·지원 근거 마련
(가칭)통합미디어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플랫폼, 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수평적 분류체계 도입 및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율체계 마련 ▪ 방송규제 완화 및 미디어산업 지원 근거 마련

□ 계류법안 현황

(2023.9월말 기준)

구 분	국 회 심 사 단 계		본 회의 (직회부)	계
	과방위	법사위		
정부 제출안	11	0	0	11
의원 발의안	278	6	17*	301
계	289	6	17	312

※ 과방위 계류 289건 중 254건은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 계류, 35건은 미상정

*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: 방송법(대안), 방문진법(대안), EBS법(대안)

- 과방위 전체회의('23.3.21.)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, 본회의 부의('23.4.27)

②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 개요

1. '23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

◇ ('22년) 14,221억원 → ('23년) 15,114억원('22년 대비 893억원, 6.3%)

□ (일반회계) '23년도 306억원, '22년도 대비 5억원(△1.6%) 감소

- 단말기유통법,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원회 소관 법규 위반 과징금 등의 세입이 불규칙하여 전반적 감소 예상(311억원→306억원, △5억원)

□ (방통기금) '23년 1조 4,808억원, '22년도 대비 898억원(6.5%) 증가

- 주파수할당대가 8,038억원(3,618억원), 방송사분담금 1,894억원(28억원), 재산(이자)수입 36억원(24억원), 기타수입 512억원(△25억원) 예상
- 공자기금 예수금 3,101억원(△2,169억원), 여유자금 회수 1,226억원(△579억원) 예상

※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, 과기정통부 공동관리

< '23년도 세입 및 수입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세 입 과 목	'22년 예산(A)	'23년 예산(B)	증 감	
			B-A=C	C/A*100
합 계	14,221	15,114	893	6.3
□ 일반회계	311	306	△5	△1.6
○ 과태료 및 과징금	303	295	△8	△2.6
○ 기타경상이전수입(정산잔액, 이자반납 등)	8	11	3	37.5
□ 방송통신발전기금	13,910	14,808	898	6.5
○ 자체수입				
법정부담금(주파수할당대가, 분담금)	6,286	9,932	3,646	58.0
기타수입(재산수입, 기타경상이전수입 등)	549	549	-	-
○ 정부내부수입(공자기금 예수금)	5,270	3,101	△2,169	△41.2
○ 여유자금 회수(전년도 예치 회수금)	1,805	1,226	△579	△32.1

2. '2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

◇ ('22년) 2,561억원 → ('23년) 2,607억원('22년 대비 +46억원, 1.8%)

□ (재원별) 예산 493억원(△14억원), 기금 2,114억원(60억원)

□ (기능별) 인건비 240억원(1억원), 기본경비 44억원(-), 사업비 2,323억원(45억원)

< '23년도 세출 및 지출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'22년 (A)	'23년 (B)	증 감 (B-A)	%
총 지출 <I+II>		2,561	2,607	46	1.8
재 원 별	I. 일반회계	507	493	△ 14	△ 2.8
	II. 방송통신발전기금 (기금총계 = ①+②+③+④)	2,054 (13,910)	2,114 (14,808)	60 (898)	2.9 (6.5)
	소 계 (a+b)	12,497	11,239	△ 1,258	△ 10.1
	① 지출				
	a 방송통신위원회	2,054	2,114	60	2.9
	b 과학기술정보통신부	10,443	9,125	△ 1,318	△ 12.6
	② 기금관리비	43	43	-	-
	③ 정부내부지출 (공자기금예탁, 예수이자상환)	144	275	131	91.0
④ 보전지출 (여유자금 운영 등)	1,226	3,251	2,025	165.2	
기 능 별	□ 인건비	239	240	1	0.4
	□ 기본경비	44	44	0	0.0
	□ 사업비	2,278	2,323	45	2.0
	①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	271	278	7	2.6
	② 방송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보호	1,075	1,109	34	△3.2
	③ 미디어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	792	816	24	3.0
	④ 방송통신 운영지원	140	120	△20	△14.3